

“재외국민의 열망 결실 맺을 것”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줌 회의 열어

재외국민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열망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대한민국에 전해졌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심과 열정, 확신을 가진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재외국민 줌 회의 개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10시 미국 남아공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16개국 재외국민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아날 회의에는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단장 주관으로 이은희 해외동포 위원단 총괄단장, 이은상 아프리카 지역 총괄단장, 배은미 아시아지역 공동

총괄단장 등 16개국 조직혁신단 해외동포 위원단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을 화상으로 연결한 회의는 국내는 21일 오후 10시, 캐나다는 아침 7시, 남아공은 오후 3시 등 각 지역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까지 전해졌다.

배은미 아시아지역 공동총괄 단장은 “저는 이재명 후보를 처음부터 지지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 확신, 추진력’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 각국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 이때, 위기의 대한민국을 영광과 번영으로 이끌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의 마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질 것 같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은 “세계 각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변방으로 전락할 것인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중대 기로에서 이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재외국민 줌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사랑과 진심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조직혁신단은 대한민국 곳곳

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이재명 지지 열망이 대한민국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유기동물을 위한 터전 만들 것”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전주 유기동물 보호센터

길고양이 돌봄 센터 조성 등 동물복지 정책 발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총상진흥원장이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길고양이 돌봄·입양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2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동물 통합복지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반려견커뮤니티 발자국(대표 이이린), 동물구조 단체 더 귀하게(안영애), 애견카페 어썬블록(신정화) 등을 비롯해 전주시길고양이보호협회(회장 유수경)와 각각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들은 동물 입양 교육, 진료, 장·단기 보호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물론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우선, 유기견,

유기묘 등 유기된 동물의 진료, 장·단기 보호는 물론 입양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함께 길고양이 돌봄·입양 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적극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및 카페 등을 확대해 사람·동물 통합복지 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또, 캣맘·캣대디 등록제를 도입해 이들의 활동을 양성·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펫푸드 산업은 여전히 블루오션인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펫푸드 산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채해후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운영, ▲인건급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리회복지원을 총괄·조정하며, 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및 관련 재원 운영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동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오늘까지 발송

전북도선관위, 투표안내문은 27일까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나)를 23일까지 전당형 선거공보(1매, 일면제)와 별도로 발송한다(1매, 일면제)가 가능하고 투표안내문을 27일까지 각 세대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5일 전당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

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수량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영내 또는 합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도 27일까지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발송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

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얻나·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cg.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를 볼 수 있으며, 전당형 선거공보는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민들에 도시농업의 길 묻다’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농업정책 관계자들과 ‘빡센토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귀를 크게 열고 답을 찾겠습니다.”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계각층의 전주 시민과 직접소통을 위한 릴레이 ‘빡센토론’을 계속 진행했다.

23일 5번째로 이어진 ‘빡센토론’에서는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 ‘도시농업의 길은 묻다’라는 주제로 도내 농업정책 현장에서 수 십년 몸을 담은 7명의 관계자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농업기술센터 참관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조영희 전 전주시농업기술센터장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전국지자체 최초로 농업기술센터가 폐쇄되는 뼈아픈 실패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중앙의 소용돌이가 없어지고, 결국 농민들의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곽동욱(전 농업기술국장)씨도 “행정,재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국 3세대 농업기술센터 붕괴, 미니리가 이미 자생력을 잃고 있다”며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 최첨단 규모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약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전주시 도도 동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단순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농도전북 위상에 걸맞은 도시농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도농복합체형으로 꾸며 농업인의 집이자, 쉼터, 결혼식 심지어 숙박시설까지 갖춘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농산물 선별, 가공 유통시설을 갖춘 포괄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지원 의지도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해야”

나인권 도의원, “전북경제서 비중 큰데도 전담부서는 1개팀에 불과” 전북도에 촉구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이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지금 전북도에 시급히 요구된다”며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며, 공동체 안전에 기여했음에도 방역지침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 감내하러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상공인 정책 강화와 시책확대를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12만 개 사업체에 달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6%와 종사자 수 기준 45.9%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의원은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전북경제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도, 그동안 전북도 행정에서 소상공인 영역은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며 열악한 조직규모를 그 사례로 꼽았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행정조직 중 일자리경제본부 등 4곳의 국단위 경제산업부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단 1개 팀에 그치고 있고, 현재 이 팀에선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 소비자 정책 등 다른 업무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반면, 전북도와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과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타 시·도는 조직구성에서도 소상공인 부서의 위상을 일찌감치 높여 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4개실 중 1개실이 소상공인정책실이며, 산하 3개국과 10개 과·단위로 구성돼 있고,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또한 모두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 중이다.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목소리가 그동안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나인권 의원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실현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열악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 할수 있는 데까지”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22일 이재명 당선을 위한 서울·경기 지역 전회걸기 캠페인에 이어 전주시내 택시 기사들을 만나 대선 참여를 요청하고 고충을 듣는 등 투표 참여 운동을 벌였다.

유 부의장은 이날 전주시역을 비롯해서 시내 택시 승강장 등을 잇달아 찾아 “이번 대선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행정이 할 수 있는 부

분을 반드시 찾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택시 기사들은 한결같이 “이용객이 너무 줄어들어 노는 차가 부지기수”라며 “택시 기사들의 삶의 질 또한 수년 넘게 변한 것이 없다”고 토로한 데 대해 “기사님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합니다”라며 “교통체증이나 택시 정류장 부족, 택시와 시민들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승강장 등을 잇달아 찾아 “이번 대선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행정이 할 수 있는 부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서 90% 지지를 이끌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북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자고 호소했다.

임정엽 전 군수는 또 후보가 제시한 지방선거 운동 중단 주장에 대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고 다섯 명의 예정자들이 다섯 개 권역별로 나누어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번두리와 취약지역, 노인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전 군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패선 안 될 5대 불가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찰 독재정권의 출현 ▲민족의 명운을 생각지 않는 무개념 ▲민생을 연방하는 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무비전 ▲본인과 부인 장모에 이어 부친까지 연루된 비리 덩어리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그는 다섯 명 출마예정자를 대신한 실무단 협의회를 이룬 시일 내에 구성하고 권역별 순환방식의 투표참여 독려와 어르신과 청년 등 취약층 공약을 위한 동별 투표참여 홍보 활동, 출퇴근 시간에 치우친 선거운동 방식을 시민이 활동하는 전체 시간대로 상시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과거제도역사문화관 설립을”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더불어민주당, 장수)의원이 지난 21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에 ‘한국과거제도역사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며, 지역민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곧 지역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

다”며 “이 상황에서 과거 제도는 전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매력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는 과거 조선 왕조의 역사적 중심지를 품고 있고, 임

진왜란 이듬해 나라를 구한 인재를 뽑기 위해 치러졌던 전주벌시가 열린 지역이다”라고 전북도에 ‘과거제도역사문화관’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제도가 각종 공무원 선발 시험 등 근대화된 모든 시험의 조상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과거제도역사문화관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중국 남경에 있는 ‘중국어박물관’의 경우 매년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